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 24 호		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발 의 자	서초구청장(부동산정보과)	제출년월일	2018.08.24.
검토위원	전문위원 최 충 열		

I

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『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』의 상위법령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3조제1항 중 별지“제8호서식”을“14호서식”으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서식에 맞게 함.(안 제3조)

나. 제6조(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)는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사항으로 삭제.

다. 제8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조 1항 중“법 제13조 및 영 제17조”의 내용이 중복되어“영 제17조”로 하고 1항 내용을 개선 함.
(안 제8조)

라. 제13조제1항 중“선정된 광고업자”를 “시행규칙 제15조7항”을 인용하

- 여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
제13조제3항 중“협약·확정하여야 한다”를 “협약·확정할 수 있다”로
하여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선 함.(안 제13조)
- 마. 제16조의 제목 “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”을“도로명주소의 사
용 촉진”으로,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생활화촉진”을 “사용 촉진”으로,
제3호 및 제4호 중 “생활화”를 각각 “사용”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법
제22조 사용촉진 용어와 맞게 함.(안 제16조)
- 바. 제18조제1항 중“연임”을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여 연임회수를 명시
하고 제3항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“위촉된 날부터 시작한
다”를 “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”로 개선 함.(안 제18조)
- 사. 제18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규정 신설.(안 제18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명주소법 제17조(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다. 기 타
- 1) 입법예고(2018. 2.22. ~2018. 3.14.)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II

검토결과

■ 본 개정안은

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

○ 안 제3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건물번호판을 교부 및 재교부할 때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(이하 ‘시행규칙’이라 합니다.)의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였는데,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을 ‘별지 제14호서식’으로 변경하고,

○ 현행 제6조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는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내지는 업무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함은 적당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.

○ 안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,
현행 조례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근거로

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합니다.) 제13조1)와

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(이하 ‘령’이라 한다.) 제17조2)를 명시하였는데,

법 제13조는 “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”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,

령 제17조는 “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”고 하여 조례에 재 위임하였으므로, 중복된 위임 조항 중 법 제13조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 기준을 명시한 영 제17조만 근거규정으로 삼는 것입니다.

○ 안 제13조 제1항은,

현행 조례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
다고만 규정하고 있어, 20일의 시작시점이 불명확하므로,

1) 제13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) 제17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11.12.30.>

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3) “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”는 조문을 인용하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,

○ 같은 조 제3항은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4)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,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 시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, 이를 “협의·확정할 수 있다”로 개정하여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○ 안 제16조는, 현행 제16조가 인용하고 있는 법 제22조5)는

3) 제15조(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) ⑥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, 관보·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⑦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,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4)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5) 제22조(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.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. 택배회사,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·규격별로 제작·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. 버스·지하철 정류장, 광장, 지하도,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. 관광호텔 지도, 교통 지도, 렌터카 지도, 관광안내 지도, 백화점 지도,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.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

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명주소의 ‘생활화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, 상위법에 맞춰 “사용 촉진” 및 “사용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,

○ 안 제18조는,

현행 조례가 위원회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것을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변경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,

안 제18조의2 “위원회의 제척·기피·회피”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였습니다.

■ 종합검토의견

이와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 및 용어를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회의 연임제한 및 제척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